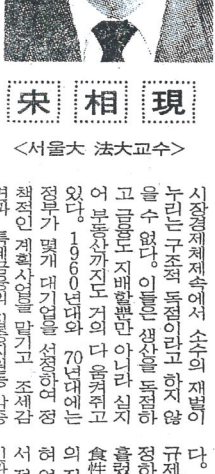
1989.10.6 한국일보

第12613號

時評

經濟力集中 격정된다



宋相現
<서울大 法大교수>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위한 여러 차례의 5개년 계획을 마련하여 산업과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온 약30년간의 과정을 돌이켜보면 이같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은 수없이 많았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먼저 오늘날 우리가누리는 경제 성장은 국민 모두가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던 조상전래의 가난을 극복하려는 강한 집념을가지고 발상으로 즉기차게 노력해온 결과임은 말할것도 없다. 그중에서도 특히근로자들은 긴 작업시간 낮은임금 그리고열악한근로조건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항상 높은 생산성과 세계가 칭찬하는 근면성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여기에다가 정부 관료들은 우수한 두뇌집단으로서 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각종 정책들을 수립·집행·확인·평가하고 강력한 정책의지를 바탕으로 민간부문을 이끌면서 높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실현을 기울여왔다. 또한 기업인들도 여러가지 정부의 지원책을 적절하게 이용하여 계획성있는 창업을 한다음 몰을 돌보지 않고 뛰면서 끊임없이 다가온 국내외적 도전과 시련과 경쟁을 이겨냄으로써 많은 國富增殖을 이룩하는데 큰몫을 다해 왔다고 할수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그러한 果實의 많은 부분이 소수기업인들에게 돌아가는 이른바 경제력집중 현상의 발가 민주주의 확립과 통일달성에 못지 않게 중요한 장기국가목표가 되어야 할 만큼 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병폐가 심각해졌다고 생각된다.

물론 개인간의 소득격차가 점점 벌어져가고 일부 고소득층의 몰지각한 과잉소비행태도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좀더 근본적 문제는 무엇보다도 경쟁을 위주로 하는 일탈성에 못지 않게 중요한 장기국가목표가 되어야 할 만큼 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병폐가 심각해졌다고 생각된다.

물론 개인간의 소득격차가 점점 벌어져가고 일부 고소득층의 몰지각한 과잉소비행태도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좀더 근본적 문제는 무엇보다도 경쟁을 위주로 하는 특전을 베풀고 사기를 올려주고 보너스들은 은행부채가 급격히 늘어났어도 눈하나 깜짝하지 않은채 부동산매입과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골몰하고만 있었다.

시중일관 재벌은 점포와 파트너십관계를 유지하여 정책의 수립이나 집행이 처음부터 대기업 위주로 되도록 제도적 틀을 형성하고 있었다. 제5공화국에 들어서서는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이에 대처한지가 8년이나 흘렀어도 재벌의 無所不爲·無所不食性 행태에 제동이 걸리고 경제력의 집중이 완화되었다는 소식은 전혀 없다. 사정은 오히려 그 반대여서 정부는 30大재벌그룹에 대한 여신관리라는 금융지책을 동원한다는 명분아래 여신규제를 신도하다가도 『이번만』 운동을 벌여서 중소기업이나 서민은 구경도 못하는 구제금융이나 긴급대출을 주기가 무려 몇번이며 그룹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설마 쓰러뜨리겠느냐』하는 배짱으로 여전히 전국민의 호주머니를 담보로 하여 살쩌만 가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수 있겠는가.

경제가 침체하고 경기가 다소 후퇴할조짐 재벌의 불평에 화답하여 투자촉진이나 수출흑자의 명분하에 대기업에 대한 갖가지 특혜정책이 만발하고 팔당의 수문을 열듯 은행은 조절용 꼭지를 제멋대로 열어주고 만다. 소수의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은 경제적 민주화와 복지사회 건설에 정면으로 역행할 뿐만 아니라 경제안정을 저해하여 사회불안과 나아가선 정치불안의 배후적 요인이 되고 우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의 앞날적 우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공산독재집단에게 크게 책잡히는 꼬투리가 되기도 한다. 또한 이같은 소수의 재벌은 국제경쟁력이나 효율적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볼때에도 그 존재가 필수불가결인 것은 아니다.

우리보다 경제성장과 수출에서 많이 앞서가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경제활동의 중심체는 수만개의 중소기업들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미국의 거대한 다국적기업들도 어느 가족이 세습체제를 유지하면서 각종 특혜를 독점하고 문어발식 소유와 경영을 하는 경우는 거의없다. 연방의회는 일찍부터 각종 독점금지법을 제정하였고, 록펠러를 비롯하여 유명한 부호가문들이 건설한 재벌왕국들은 모두 연방정부 법부에 소속되어 기업독점의 해소 또는 분할을 전담하는 검사들인 트러스트 버스터의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인한 제소와 사법부의 용기있는 판결에 의하여 오래전에 깨뜨려졌으며, 행정부가 구후에도 여러가지 법제도나 정책을 강력히 펴 나감으로써 재벌에 의한 경제력 집중을 해결했다고 볼수 있다.

또한 제2차대전 직후 맥아더 점령군정부가 일본의 해묵은 재벌을 해체한 역사적 사례는 닛부나도 잘 알려진 일이다.

재벌의 송유형태는 다변화되어야 하고 사업영역은 전문화되어야 한다. 기업규모의 대소를 불문하고 경제활동의 기회는 균등하게 보장되어야하며 각종 특혜는 폐지하되 각종지원은 골고루 베풀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경제력 관권집중의 방지를 위한 각종대책은 소수재벌과 파트너십관계에있는 일부행정부 관료들에 의하여 소홀하게 다루어져 왔거나 이제는 입법부와 사법부까지도 모두 문제의 심각성을 꿰뚫어 보고 三府가 공동으로 일치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때가 왔다고 믿기이다.